

#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이 중 호 | 한나라당 전문위원

## I. 개요

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 유도

1.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는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핵심공약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5대 법안 추진

### 2. 5대 법안 및 주요 내용

1) 국가장학기금 신설 및 학자금 제도 확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저소득 가정에 대한 학자금 용자는 장학금으로 전환
-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용자제도를 소득연동 학자금 용자제도(등록금 후불제)로 발전

2) 사립대학 민간기부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교 등

3)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평생교육법 개정안'

- 개인마다 학습 비용을 지출하는 개인학습계좌를 신설하여 본인이 그 계좌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뿐 아니라 (국가)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에게 학습 지원을 할 경우 그 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토록 함.
- 우선적으로 군 복무 수당을 증대하고(6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수당을 학습계좌에 예치

4) 국립대학 재정지원 구조혁신 '국립대학 재정지원법 제정안'

- 정부의 지원이 자의적이 아닌 객관적인 배분공식(포물리 편당)에 따라 배분되도록 국립대학 재정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정부의 대학통제 방지

5) 지나친 등록금 인상 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학생 1인당 교육

비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제외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및 대학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토록 의무화

## II. 검토 사항

- 1) 국가 장학금 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발생
- 2) 10만원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특례 적용 대상 남발
  -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의 경우는 정치권의 수입원을 규제하기(정당 후원회 폐지, 기업의 후원금 금지 등) 위한 반대급부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특혜라 보기 어려움.
- 3) 봉급 인상으로 인한 처우 개선은 의무복무중인 사병보다 직업 군인을 우선시키고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은 복무기간 단축 또는 모병제 추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 4) 국립대학 재정지원 방식 변경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의 직접 상관성 미흡
  -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 따른 견제
- 5) 등록금 인상 제한은 자율적 결정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이와 유사한 내용을 먼저 추진한 미국 의회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이 'The College Access & Opportunity Act (H.R. 609)' 현재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 계류 중

## III. 참고 사항

- 1) '등록금 후불제' 해볼 만하다(2006. 4. 15 한겨레신문 19면, 한민희).

요즈음 대학가는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생 한 명이 학기당 평균 320만 원씩 4년 동안 최대 4천만 원을 대출받아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인데, 이자는 7.05%를 적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로, 올해 이 방식에 따라 모두 25만 6226명의 대학생이 833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일부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얼마 전 교수노조가 주장한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가 정부의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덧붙인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고등교육 분담제도(HECS)를 도입해 본인 선택에 따라 재학 중 또는 졸업 뒤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재학 기간에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는 대입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재학 중에 등록금을 내는 학생에게 수능시험 성적에 가산점을 준다면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졸업 뒤 취업해 연봉이 일정한 금액에 이를 때 등록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대학 재정지원을 위해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거센 반발을 불렀다. 결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했음에도 소속당인 노동당 안에서 마저 반발이 심했고, 2004년 1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될 때의 표차는 5 표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등록금을 재학 중 납부하는 학생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도 안 될 것이다. 대신 등록금 후불제를 선택한 학생이 졸업 뒤 취업해 일정한 연봉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월소득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늘려 적립한다. 이 금액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의 지출비용 가운데 여유자금 운용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 10년에서 20년 사이 대출받았던 학생이 갚지 않는 사고가 생길 때를 대비해 마냥 쌓아놓는 돈이어서 여유자금으로 불리는 것이다. 정부가 우선 이 자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면 2007년 1학기부터 4학년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대출 받은 학생이 이듬해 직장을 구한다면 비록 무이자라 할지라도 회수율이 좋으면 상환기간이 짧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믿는다.

- 2) 인센티브 및 규제의 병행추진
- 3) 개병제로 인한 안보비용 절감 및 군복무 가산 점 폐지 등 군복 무에 대한 보상책 약화 고려
- 4) 국립대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대체 지원 개념이 아님.
- 5) 교육비 신출 공개를 통해 불신감 해소
  - 등록금 관련 학내 분규의 상당원인이 불신에서 비롯

#### IV. 한나라당 입장

기업이 사원모집을 하면서 대학 졸업을 응시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대다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을 고려해 대학 졸업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사회 부담률을 올리는 것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한 것이 지난 5. 31 지방선거 공약인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한나라당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부금 전액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기여입학제를 검토하였으나 기여입학제 도입의 타당성 및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거부 정서가 강한 현재로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음.